

발제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책 검증 보도의 실종은 한국 언론의 해묵은 문제다. 20대 대선 보도에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대다수 언론은 정책에는 관심이 없고 후보 동정과 캠프 간 갈등을 중계하는 데만 몰두한다. 이 문제는 권력에만 관심을 갖고 일반 시민은 주변화시키는 언론의 왜곡된 평소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선거 과정에서 언론은 '미래 권력'인 후보에만 집중하고 시민은 외면한다. 유권자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후보의 입만 쳐다본다. 정책 검증 보도의 실종은 바꿔 말하자면 유권자의 실종이다. 언론이 정책 보도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출발점은 유권자가 아니라 후보다. 유권자의 요구로부터 정책 의제를 도출하기보다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을 단순 전달하기만 한다. 공약이 전달되기는 하지만,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의미를 해설하고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이 선거 국면에서 말하는 '검증'은 정책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언제나 후보에 대한 검증이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마다 꾸리는 소위 '검증팀'이 하는 탐사 보도도 대개는 후보 검증에 머문다. 우리 언론은 후보 경력과 사생활을 검증하는 노하우는 뛰어나지만,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노하우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정책 검증이 더 어려워서가 아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선 국면에 나오는 특종 보도도 열에 아홉은 후보나 가족의 과거 행적을 폭로하는 내용이다. 언론이 이렇게 사생활을 파헤쳐 폭로하는 보도에만 집중하면 이번 대선뿐 아니라 앞으로도 선거는 계속 '비호감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레거시 미디어 중 이번 선거에서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여 눈에 띄는 정책 보도를 한 곳은 KBS와 한겨레였다. KBS의 대선 기획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는 전문가 110명에게 한국 사회의 주요 의제를 물은 뒤, 여기서 도출된 36개 의제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10개 의제를 추렸다. 그리고 이 의제들과 관련된 후보들의 공약을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점검하고 있다. 집값 안정, 일자리 만들기,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의제가 다루어졌다.

한겨레의 대선 기획 <나의 선거, 나의 공약>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주요 의제 6개를 선정하고 이 의제와 삶이 맞닿아 있는 유권자 10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유권자의 삶과 경험에서 우려나온 이야기를 현장성 있게 전달한 뒤, 유권자들이 후보들에게 구체적 공약을 요구한 내용을 한겨레가 후보 캠프에 전달해 답변을 받는 형식이다. 지금까지 기후 위기, 부동산, 플랫폼 노동 등의 이슈가 다루어졌다.

유권자로부터 출발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두 기획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물론 두 언론사의 기획이 완전무결할 순 없다. KBS의 기획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압축하여 심층성이나 전달력이 떨어졌다. 메인뉴스에서의 배치나 분량에서 높은 비중을 부여받고 있지 않다는 인상도 준다. 한겨레는 지면에서 해당 기획에 깜짝 놀랄 만큼 높은 비중을 부여했지만, 포털에서 뉴스가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뉴스 이용자들의 흥미를 끌어 정책에 대한 실질적 관심과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일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정책 검증 보도의 빈곤과 관련하여 유권자(인 동시에 뉴스 이용자)들의 문제도 지적되어야 한다. 뉴스 이용자들도 후보자의 정책 수행 역량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기사보다 정쟁과 사생

활을 다루는 기사를 더 많이 소비하는 행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언론이 정책 검증에 소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책 보도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다. 공들여 정책 검증 기획을 해서 기사를 내보내도 캠프 간 막말 공방을 전하는 질 낮은 포털 기사의 10분의 1도 클릭이 안 나온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언론이 관심을 갖고 광고주가 선호하는 핵심 독자(시청자)층에게는 그리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40대-중산층 이상 유권자들에게 불평등이나 불안정 노동은 남의 이야기다. 기후 위기나 젠더 이슈도 젊은 세대에 비해 피부에 와닿지 않고, 지역 소멸은 아예 관심조차 없다. 선거 보도를 상업주의적으로만 접근하는 언론의 태도가 문제인 건 사실이지만, 언론의 주요 소비층이 한국 사회의 중요 의제들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언론도 이런 이슈를 다루는 데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토론문: 저널리즘과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비성찰적 가속화 현상에 관하여

정준희 (한양대학교 ERICA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미디어를 통해 대중(과 기대컨대 언론 현업자들)을 청중으로 삼은 저널리즘 비평을 수행해온 지도 어느덧 4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조금이라도 바뀐 게 있을까? 수동적 청중이었던 이들이 저널리즘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사고하기 시작했고, 그간 어렴풋한 느낌 수준에 머물러 있던 문제에 대해 나름의 정교한 시야와 개념적 수단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한다.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언론 현업자들에게 이르러서는 사실상 ‘무효과’나 심지어 ‘역효과’까지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초기에는 약간 신경 쓰는 듯도 하더니만, 어느 순간부터는 비평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파적 혹은 포퓰리즘적) 공격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기껏해야 언론 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공론 정도로 무시하는 모양이다. 물론 내놓고 말하지는 못해도 자신의 직업과 행태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는 경험을 하게 된 저널리스트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런 각성 때문에 자신의 직업집단에서 ‘내놓은 사람’으로 배제되거나, 언론계/개별 직장 안에서 상승의 사다리(career ladder)를 원활하게 밟아 올라가는 데 장애를 겪는 경험을 토로한다. 현재 수행되는 저널리즘 비평은 당연히 완벽하지도 않고 많은 한계와 심지어 부정적 요소까지도 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바름이 있다면, 그 올바름은 우리 저널리즘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서는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

오늘의 논의는 이런 대중적 비평보다 훨씬 더 깊고 정교하며 호흡이 긴 학술적 분석에 관련되어 있다. 처방(prescription)이기보다는 진단(diagnosis)이고 기술(description)이며, 당장의 현실에 개입해서 단기간에 개선을 도모하는 작업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부터 위안을 얻는다. 대개는 하루하루의, 심지어 요즘엔 매 시간 단위의 변화를 쫓는 저널리즘을 쫓는, 길어봤자 일주일 단위를 넘어서기 어려운 대중적 저널리즘 비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시해온(problematize) 문제를 탄탄한 이론적 토대를 갖춘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하기 때문이다. ‘내가 영 틀리지는 않았구나’하는 안도와 ‘나 혼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구나’하는 연대감을 얻는다. 물론 적어도 내가 수행하려고 노력해온 저널리즘 비평은 그간 우리 학계에 누적된 이론적 시야와 경험적 연구를 적용하고 대중적으로 변환하는 작업과 함께 (바라건대) 그 결과를 다시 학술적 논의 속에 재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낮은 것은 아니다. 그런 까닭에 잠시 찾아온 위안과 연대감 뒤에는 앞서 언급했던 막막함과 무기력함 같은 것이 뒤따른다. 현실에 대한 진단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면, 왜 이런 문제는 반복되는 것을 넘어 점점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비판/비평의 숙명이 대체로 그러하듯, 올바름이란 본래 현실로 구현되기 어렵기 때문일까, 아니면 올바른 게 그렇게 올바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일까.

이는 당위(Sollen)와 존재(Zein) 사이의 격차라는 고전적인 이슈와 맞물려 있는 탓에 당장 이에 대한 더 긴 논의로 휘말려드는 건 중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 좀 더 존재의 문제, 우리의 개별 의지가 개입하기 어려운 현실의 구조와 그 작동 방식의 문제에 집중해보고자 한다. 실상 그마저도 허다한 논의 주제를 품고 있지만, 우리 저널리즘과 그에

중점적으로 연계된, 즉 우리 저널리즘이 매개하면서 스스로 그 안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더 ‘가속화된 환류 고리(feedback loop)’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요컨대 저널리즘은 디지털 환경에서 확인되는 즉각적 반응과 그에 대한 저널리즘적 대응이라는 환류 고리 안 속에 점점 더 (비성찰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선거시기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역시 그와 같은 미시적 반응-대응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가속화, 협애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 중심에는 여론조사가 있다.

적어도 현대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저널리즘에서 여론조사는 대단히 ‘비용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계기(moment)이자 유력한 동기(motif)로 자리 잡았다. 사실상 대부분의 정치 저널리즘과 시사 콘텐츠는 유력 정치인의 (혹은 그에 관련된 저널리즘의) 발언과 행보 → 논란의 증폭 → 여론조사 →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의 증폭과 확산 → 그에 대한 정치인의 대응 → 그 대응에 대한 논의의 증폭과 확산 → 여론조사 →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의 증폭과 확산의 환류 고리에 기초를 두어 생성되고 굴러간다. 여론조사 이슈를 두고 그것의 한계와 심지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만, 그것은 이런 대세화된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바꾸지 못한다. 여론조사가 실제의 민심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더 이상 문제의 핵심이 아니거나 문제의 작동 방향을 교정하기 어렵다. 여론조사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가시적 발화자로서의 유력 정치 행위자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뭉뚱그려진/비가시적 대응 발화자로서의 유권자의 반응을 (더) 단순화하여 (더) 가시화시키는, 그럼으로써 사실상 무정형의 여론 자체를 정형적으로 창안하고 확정시키는 대체불가능한 지배적 계기가 되었다. 저널리즘은 목적의식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조직하고, 이 여론조사로부터 (심층 취재나 분석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부수적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며, 그 역시 과거에는 ‘시청률’ 현재에는 ‘트래픽’으로 단순화된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의 환류 고리 안에서 비성찰적으로 가속화된다. 정치는 정치인의 정견과 행위 그리고 그에 대한 장기적 반응 속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저녁으로 배달되는 여론조사 결과표에 따라 고무되고 좌절하면서 대단히 단기적으로 자신의 발화를 조정한다. 이들 모두 놀라울 정도로 반사적(reflective)이고, 그렇게 더 반사적일수록 그럼으로써 더 확산적일수록(viral) 더 유력해지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놀라울 정도로 성찰적(reflexive)이지 못하게 된다.

이른바 질주학(dromology)의 창시자인 폴 비릴리오(Paul Virilio)는 실시간 속보의 일반화로 인해 고착된 즉자적이고 비성찰적인 보도 관행을 타파할 대안으로서 전통적 활자 매체가 해온 바 있는 심도 깊은 분석 보도를 강조했다. 다들 어렵듯이 느끼고는 있지만 어쩔 도리 없이 휘말려드는 현대 사회의 시간가속화 현상을 재치 있게 포착해낸 이론가의 제안 치고는 사뭇 전통적이고 싱겁게 느껴진다. 성그런 심층성은 현재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환류 고리 안에서 충분히 확산되어 성찰적 반응과 대응을 유발함으로써 걱정된 ‘감속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올바른 것이 올바름으로만 그치지 않고 ‘확산성’과 ‘반응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면, 이 또한 실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거나 심지어 비성찰적 환류 고리 안에 휩쓸려들어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 지금 필요한 저널리즘 ‘비평’과 그를 뒷받침해줄 저널리즘 ‘학’의 요체는 효과적인 여론조사 비판에 있을지 모르겠다.